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시행 앞두고 시·도 국장 간담회 개최

- 3차 시범사업 공모 참여 독려 및 본사업 준비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본사업 전국 시행 준비를 위해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신청: 8.18~29, 선정: 9월 초(현재 131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중)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10월부터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제도 시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시·군·구가 통합돌봄 시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붙임 > 1. 통합지원 시행 준비를 위한 시·도 국장 간담회 개요  
 2.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개요  
 3.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3차)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책임자	단 장	장영진 (044-202-3030)
		담당자	팀 장	박준형 (044-202-3041)
			사무관	김수명 (044-202-3034)



**□ 개요**

- (목적) 의료·요양·돌봄 통합 본사업 준비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
- (일시) '25. 8. 22.(금) 10:00~11:00
- (장소) 영상회의
- (참석자) 제1차관, 노인정책관, 17개 시·도국장,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
- (논의안건)
  - '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차 공모 참여 독려
  - '26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 준비사항 등 설명
  - 지자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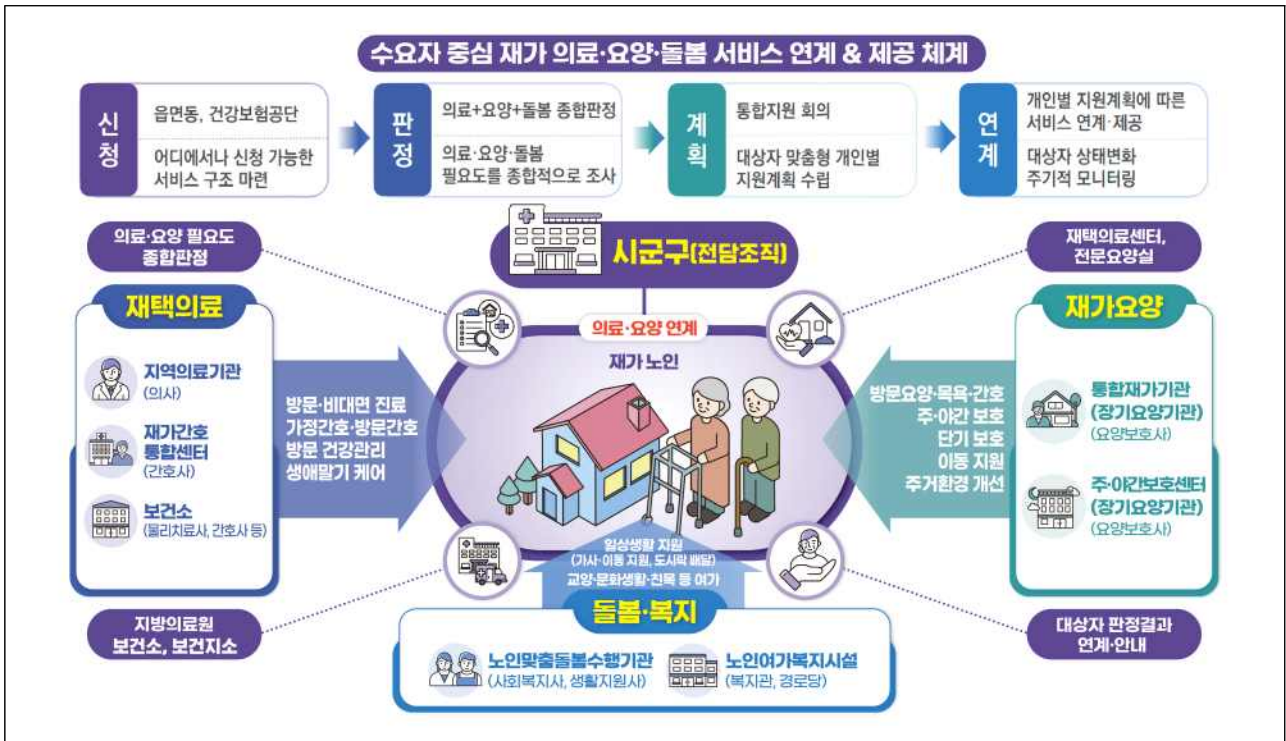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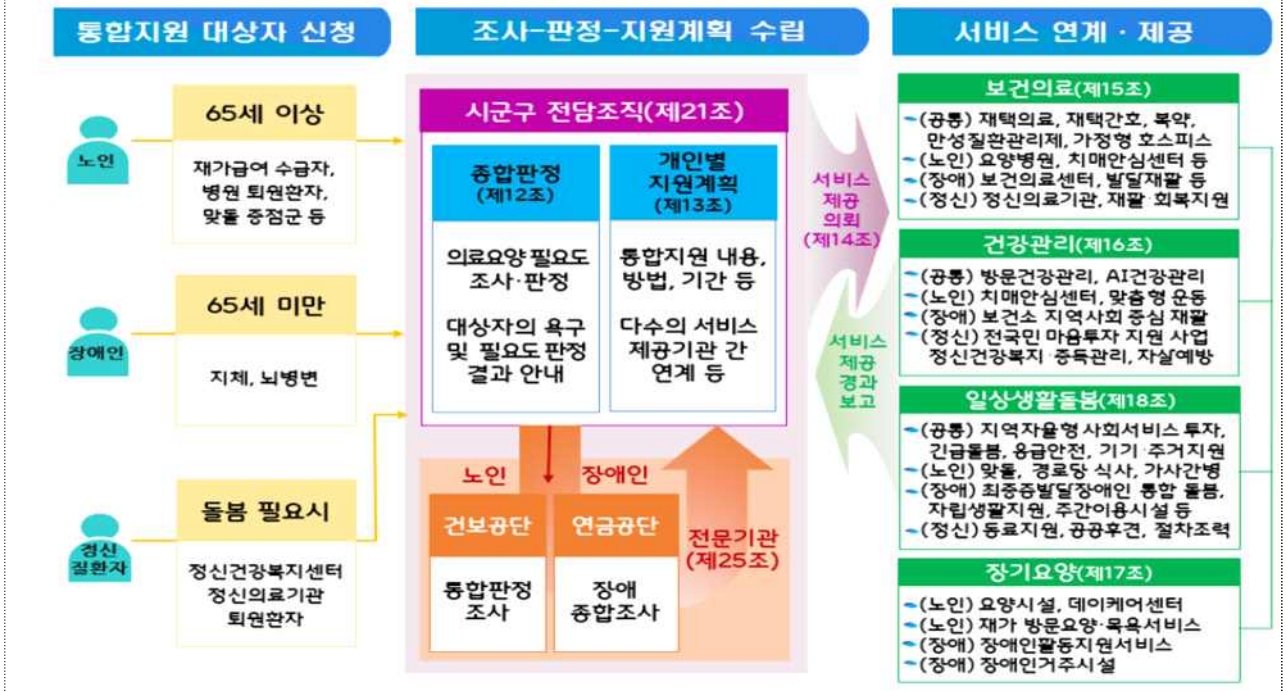
**□ 진행흐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3	3'	· 차관님 인사말	
10:03~10:18	15'	· 의료·요양·돌봄 시범사업 관련 준비사항 설명	돌봄통합지원단장
10:18~10:58	40'	·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참석자
10:58~11:00	2'	· 마무리	

◆ '26.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적용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 노인·장애인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대상자에 포함(복지부 사전협의 要)
  - **(지원내용)**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 **(지원절차)** ①신청→②조사→③판정→④지원계획→⑤서비스 연계→⑥모니터링
    - ① (신청) 사전조사 실시, 읍면동·건보공단 통해, 본인·가족 + 직권 신청
    - ② (조사) 통합판정조사 통해 필요도 조사(건보공단 수행, 지자체 동행), 퇴원환자 등 긴급사례나 지역돌봄 중심사례는 지자체 직접 조사
    - ③ (판정) 통합판정조사 등을 바탕, 지자체가 필요도와 지원방향 판단
    - ④ (지원계획)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시군구 총괄) 운영
      - \*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재택의료센터, 복지관 등) 참여
    - ⑤ (서비스 연계)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된 서비스 지원계획에 맞춰, 의료·요양·돌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⑥ (모니터링) 일정 주기(3개월)로 적절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대상자 상태변화 체크, 필요시 지원계획 변경
- ※ (종결) 사망·입원·욕구충족완료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통합지원 종결

##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



### 붙임 3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3차) 개요

현재 131개 시군구 참여 중(전체 시군구 대비 57%), 3차공모 '25.8.18~8.29

#### □ 추진 배경

- 2025년 131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중, 20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필요
- 민·관 협력 인프라 마련, 표준모델 프로세스 경험 축적 등 지자체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지원
- 기존 노인 외 65세 미만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시범사업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 주요 내용

- (추가공모)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산을 위해 신규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 (지원내용) 교육·전문 컨설팅 지원 및 건보공단 등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 (교육)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합동 컨설팅으로 사업방향 설정, 실행계획서 작성 등 지원
- (협업체계) 통합지원 협업 인력 배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 지원
- \* 65세미만 장애인 통합지원 사업은 '26년 시스템 개선 시까지 수기 관리
- (조사판정) 본사업에서 활용될 종합판정 체계 구축 및 시범 적용

#### □ 추진 일정

추진단계	내용	일정
① 시군구 공모	· 지자체 공모(공문을 통해 신청)	'25.8.18~29
② 시군구 선정	· 심사·선정 및 결과 통보	'25.9.1~2
③ 교육 지원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통합판정 등 안내 ·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 제공 및 집합 교육 등 실시	'25.9월
④ 사업 준비	· 전담조직·인력 구성, 민관협업체계 구축 등	'25.10월
⑤ 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 · 주간회의 운영을 통한 지자체 준비 상황 점검	'25.10~'26.3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